



미국의 도청과
기밀문서 유출
파장
2~3면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 위해
노동자·서민 내치는 것
6면

삼성전자
감산 선언과
한국 경제
7면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8~10면

국익 같은 것은
없다
12~13면

프랑스
반란
14~15면



우크라이나 전쟁

4~5면

한일·한미 관계는

민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

관련 기사 6면



미국 기밀문서 유출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김영익

기밀문서들에는 러시아는 물론 동맹국 정부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부분 도청 등 스파이 행위로 얻은 것들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등의 스파이 행위를 문제 삼아 왔다. 그래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퇴출시켰고,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감시 도구'라며 틱톡을 금지하라고 성화였다.

지난달에 바이든은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는" 스파이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면, 미국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었다.

사실,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 질과 양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왔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하고 독일 총리 메르켈 등 주요국 정상들의 통화 내용까지 도청해 왔음이 2013년에 폭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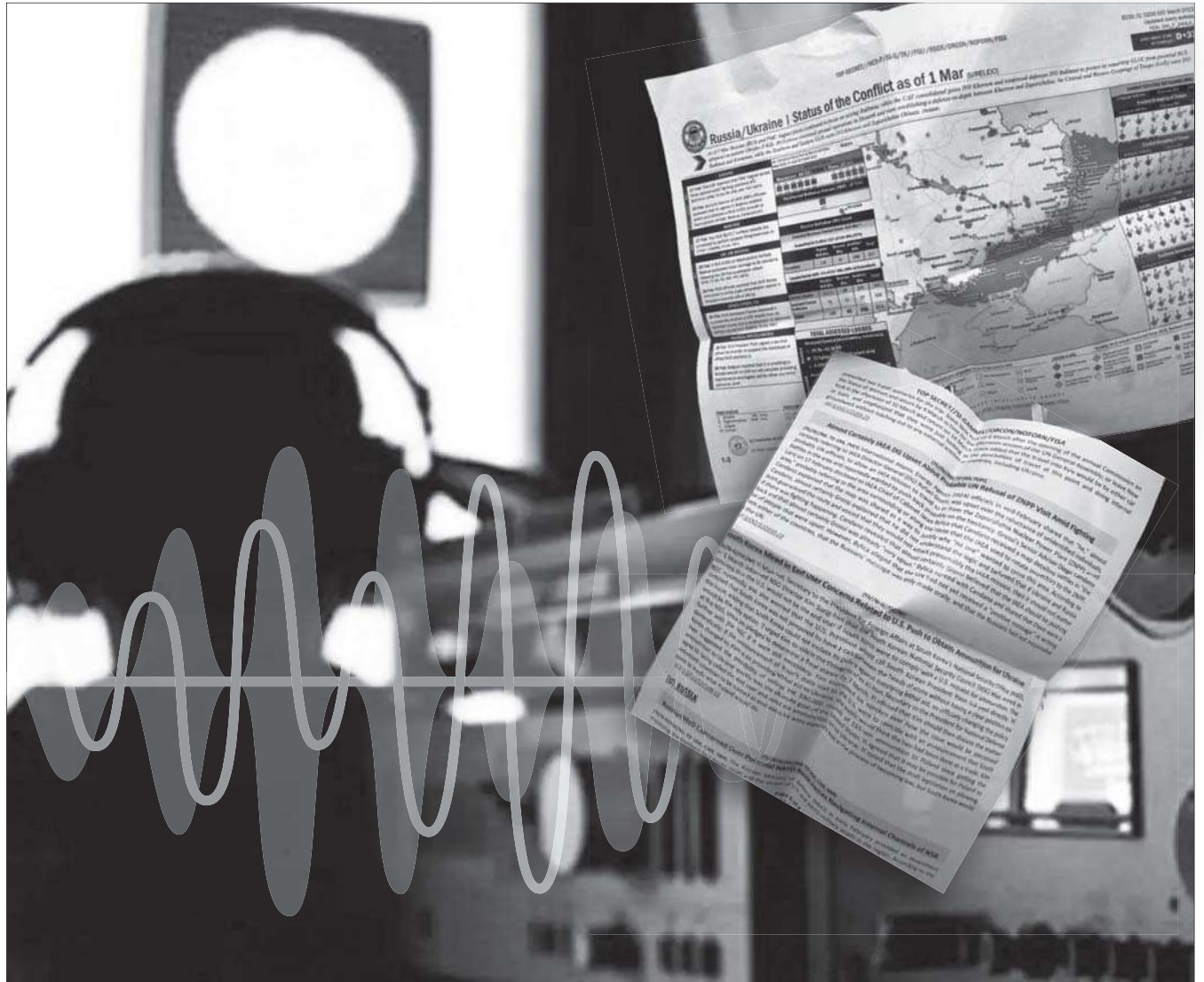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동맹국 지도자들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동맹국들을 상대로도 스파이 행위를 벌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동맹이더라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인 것이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스파이 행위가 적과 친구를 가리지 않고 더 활발하게 벌어졌을 듯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도록 촉구해 왔다. 그리고 주요국 정부들이 전쟁에 관해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한국 정부 도청 정보, 이스라엘이 무기 지원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안,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관한 보고 등에는 이런 사정이 반영돼 있었을 것이다.

이번 문서 유출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문제를 둘러싸고 어떻게 분열돼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운운이 모두 헛소리임을 보여 준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에서 동맹국들을 좀더 자기 뜻대로 주무르려고 엄청난 양의 스파이 행위를 벌여 왔다

윤석열 정부,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고려

이번에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도청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도 함께 폭로됐다. 거기에는 4월 윤석열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요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내부 논의가 정리돼 있다.

이를 보면, 당시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은 바이든이 직접 윤석열에게 전화해 무기 지원을 요청할지 모른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외교비서관 이문희는 그 전에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원칙을 공식적으로 바꾸자고 말한다. 이참에 적극적인 전쟁 지원을 미국에 약속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반면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은 미국의 요구에 그대로 응할 경우에 생길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래서 폴란드로 포탄을 우회해서 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화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국내 여론 등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전쟁 지원 요청에 되도록 응하려 애쓰고 있음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는 이 도청 내용이 "상당수 위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실제 행동과 정황은 도청 내용이 진실에 가까움을 짐작케 한다. 미국의 다른 문서에는 한국산 155밀리미터 포탄 33만 발을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수송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도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탄약 인도와 관련해 한국과 얘기를 나눴다."

또한 4월 12일 한국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판매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7월 나토 정상회담에 윤석열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요구가 더 들어올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과 미국의 광범한 스파이 행위가 새삼 확인됐다.

유출된 문서 중에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 나토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주는 문서들이 있다. 본지가 전부터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3월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토의 특수부대원 100여 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 아마도 그 특수부대원들은 정찰과 우크라이나군 훈련에 관한 임무를 수행해 왔을 공산이 크다.

나토의 군사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금세 무력해졌을 것이다. 특히, 한 문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봄철 공세 계획을 다루는데,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 부대 어디에 언제 배치될지가 담겨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두고 격돌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이 소모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

우크라이나의 봄철 공세를 위해 편성되는 12개 여단 중 9개 여단이 미국 등 나토의 무장과 훈련 지원을 받고 있다고도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 9개 여단에 필요한 장비에는 250대 이상의 전차, 350대 이상의 기계화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가령 우크라이나 82여단은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 영국 첼린저 전차, 독일 보병 전투 차량 등 150여 대로 무장된다. 이 부대는 공세에 투입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

33여단의 경우,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32대와 미군 전술 차량 90대를 받게 될 것이다.

소모전

다른 문서를 보면,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18만 5900~22만 3000여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추산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그 규모는 12만 4500~13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두고 격돌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이 소모전을 멈출 생각이 없다. 기밀문서에는 올해 안에 평화협상이 열리지 않고 소모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의 분석도 들어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 즉 경쟁자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대지를 적시고 있지만, 이 냉혈한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비밀리에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영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알면서도 항공모함 1척을 인도-태평양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중 갈등과 얽히며 위험을 키우는 양상이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전장으로 해서 벌여지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동이 더 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 문제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미국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열해 가는 세계 속에서 주요국들은 “국익”을 위해 이런 일을 더 빈번하게 벌일 것이다(관련 기사 12~13면).

그렇지만 이번 문제를 주권 침해 문제로 볼 수 없다. ‘주권’은 민족주의자들의 관심사이고, 한국은

미국의 (반)식민지가 아니며, 한국인들은 미국의 억압을 받는 국민이 아니다. 이번 도청과 반도체지원법처럼 미국의 압박을 받아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게 남한의 군사적·지정학적 이익에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폭로된 내용에 담긴 한국 정부의 선택에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기 지원안이 예기치 않게 폭로된 것에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서방 제국주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은 곧 노골적이 될 것이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한국도 이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할 공산이 큰 것이다.



한민일보 제공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paper.org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f 노동자 연대 @wsppaper
wsppaper_org 노동자연대TV



wsppaper.org/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ISSN 2005-8217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인필임장번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paper.org



9 772005 821003 16

우크라이나 전쟁

참혹한 소모전의 대가를
평범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김인식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들이 유출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그 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와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또, 미국 첩보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매우 광범하다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다(관련 기사: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만큼 미국 지배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건 판돈이 만만찮음을 보여 준다. 물론 푸틴이 건 판돈도 매우 크다.

IMF 총재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예바는 이렇게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람들을 죽일 뿐 아니라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지정학적 긴장을 조성하고, 세계가 하나로 일할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YTN, 2023년 4월 11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다 자기 측 사상자 숫자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피해를 부풀린다.

이번에 유출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18만 9500~22만 3000명으로 추정했다. 또,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수는 12만 4500~13만 1000명으로 추정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몇 주 동안 언론에 밝힌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치이지만, 전쟁의 끔찍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유출된 기밀문서들은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에서
나토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전쟁으로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삶이 파괴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민간인 피해도 엄청나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약 2만 1300명이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집계).

또, 우크라이나의 해외 난민은 796만 명이고, 국내 실향민은 591만 명이다(유니세프, 2023년 1월 17일 기준).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30퍼센트 역성장했다(IMF, 2023년 3월 21일 발표).

이것이 전쟁 피해의 전부가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물가 인상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한 국제 기관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이미 팬데믹과 봉쇄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났다. 물론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가 주도하는 금리 인상은 임금을 떨어뜨려 이윤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계급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선봉에 섰다. 그러는 동안 국민보건서비스 지출이 삭감돼 영국 간호사노조가 역사상 최초로 파업에 들어갔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물가 급등과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기 위해 연금을 개악하려다 1995년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에 부딪혔다.

노동자들의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슬로건을 얼핏 실감하게 해 주는 상황이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2023년 2월 1일 자)는 서방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이렇게 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군대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촉구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서방 군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벌일지도 모를 고강도 전쟁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음을 깨닫고 있다.

“러시아의 맹공은 이제 제1차세계대전을 섬뜩하게 연상시키는 소모전으로

바뀌었다. 비록 더 현대화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과 그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려고 무기와 탄약을 쏟아붓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서방이 제공한 휴대용 대전차 무기인 정밀 유도 미사일과 나토 표준 대포는 러시아 침략군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이었음이 입증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요구 때문에 무기고들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무기 재고 보충 능력을 앞지르고 있다.”

전쟁이 “섬뜩”하면서도 “잘하는 일”이라는 말은 제국주의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명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 준다.

미국이 한국의 탄약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이번에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를 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한국 외교·안보 최고위 관리들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도청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전차 미사일뿐 아니라 전차와 전투기를 제공해 달라고 서방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 미국의 전략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어느 쪽에도 승리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개전 직후에는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진군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보였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개전 직후 크렘린 관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푸틴에게는 세 명의 고문이 있다: 이반 4세, 표트르 1세, 예카테리나 2세.”(〈파이낸셜 타임스〉 2023년 2월 24일 자)

이반 4세는 차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통치자였고, 표트르 1세는 러시아 제국을 출범시킨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였으며, 예카테리나 2세는 크림반도와 폴란드의 상당 부분을 정복해 영토를 넓힌 러시아의 황제였다. 푸틴은 옛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꿈꾸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란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한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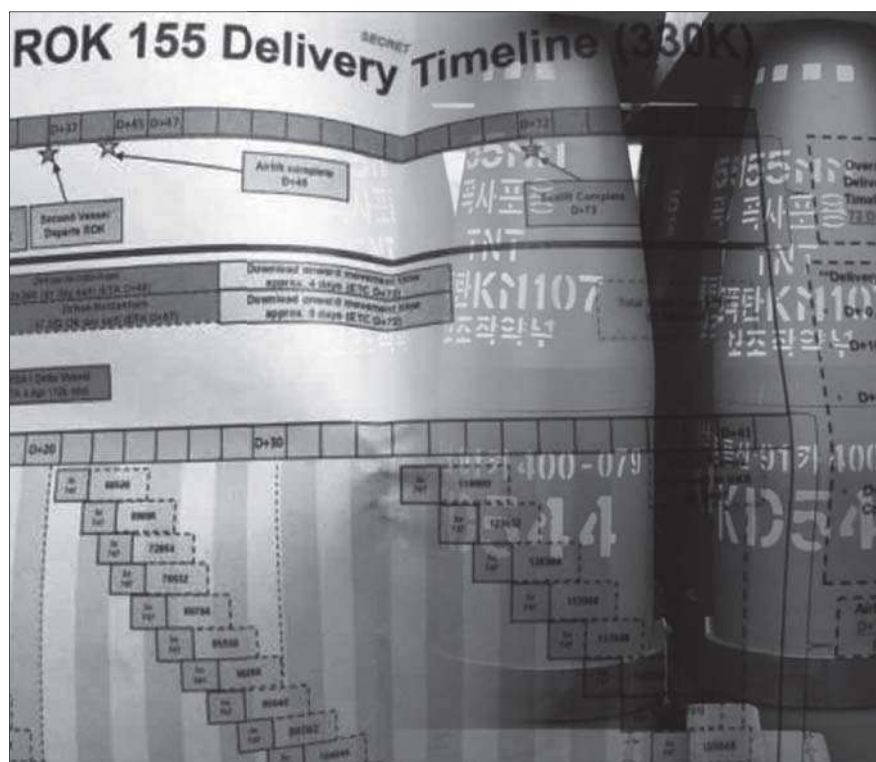
푸틴이 상대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서방 후원자들에 의해 무장되고 있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지난 2월 14일 이렇게 말했다.

“이 전쟁은 지난해 2월에 시작되지 않았다. 2014년에 시작된 것이다. 2014년 이래 나토 동맹국들은 훈련과 장비를 제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고, 그 덕분에 2022년의 우크라이나군은 2020년이나 2014년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로 했을 때 그 지원은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됐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 양측 모두에 의해 준비됐던 것이다. 그리고 신속한 승리를 장담하던 양측의 시나리오는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재탈환할 때까지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한 고위 관리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는 한국산 포탄 수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표까지 포함돼 있었다

들에게 모든 것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각인시키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워싱턴 포스트〉, 2023년 2월 13일 자)

젤렌스키의 반격이 미국의 대중국 전선의 힘을 분산시킬 정도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표는 중국과의 대결이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은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견제·포위·억제를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장(장관) 친강은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이 급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치달으면, 어떤 가드레일도 차량의 탈선과 충돌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틀림없이 전쟁과 대결이 벌어질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2023년 3월 8일 자)

이런 전략적 목표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한도 안에서 전쟁 지속에 맞춰져 있다.

미국 제국주의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뿐 아

니라 가져다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결과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의 참호들은 제1차세계대전의 참호들과 비슷하게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의 프로파간다에 대해 무비판적인 일부 좌파들이 주장하듯)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을 둘러싼 것이거나, (푸틴의 러시아를 두둔하는 다른 일부 좌파들이 주장하듯) 돈바스 주민들의 자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추천 책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각축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외 지음
책갈피, 352쪽, 17,000원

bit.ly/ukr-war-book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래 최악의 전쟁 위협 그림자가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점 깊이 관여하려 하고 있다.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 따르면, 전 외교비서관 이문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전 국가안보실장 김성환은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한 뒤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등을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로 추정되는 문서도 있다.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그리고 확대)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해 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드러냈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가 나토의 전쟁에 협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일 등 서방 제국주의 편들기, 친기업적 정책, 민주적 권리 침해 등으로 점점 더 큰 반감을 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서방 제국주의 편들기의 일환이다.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유지 맥락에서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 것과 함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듯하다.

윤석열은 미국의 이런 요구를 먼저 이행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 생각이었던 듯하다.

윤석열은 4월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윤석열은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언급한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모두 미국 정부와의 협력에 의존해 풀어야 할 경제 문제들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 목록에 올려야 할 쟁점들인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심지어 일본마저)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바라는 명시적 보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공정해 보이는 이 거래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치면서까지 한일 군사 협력을 복원한 것도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은 늘고 있다. 미국에 도청을 당했는데도 윤석열이 미국에 항의하지 않는 것이 더욱 그런 견해에 힘을 실는 듯하다.

상호 이익 동맹

그러나 이런 양상은 한국이 미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은 일방적 수혜자도, 일방적 수탈자도 아니다. 미국이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듯이, 한국 지배계급도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와 한국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



한·미 지배자 모두에 맞서야 한다

를 중심으로 판단·선택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협력만 한 게 아니라 상호 무역 분쟁을 겪었고, 북한·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로 불신과 갈등도 겪어 왔다.

지금 한국 정부가 지정학적 미·중 갈등에서 미국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국 경제 성장의 배경이 돼 온 한미동맹과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가 여전히 한국 자본주의에 더 이롭다고 보고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도 지금 동맹을 경제적으로 배려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금융 위기에서 보듯 미국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바이든 정부는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이번 도청 건도 미국의 동맹 포섭과 관리에서의 난관을 보여 준다. 사실 이 건에 대한 양국 반응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드러난다. 미국은 문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동맹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면, 미국에게 양보받고 싶은 게 많은 한국은 미국 비판에 조심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눈치도 봐야 한다.

한미동맹 전반부에 미국은 동맹 유지 비용을 충실히 지불했다. 냉전의 최전선 국가로서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시장 자본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잡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원조 규모는 한국 총생산의 10퍼센트(정부 예산의 40퍼센트)에 이르렀다. 미국 측 비용에는 우익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후원도 포함돼 있었다.

그에 따른 권위주의적 통치와 초차취는 한국의 노동계급이 치른 한미동맹의 비용이었다.

이 관계는 경제적 상호 관계 변화를 겪으며 달라졌다. 1980년대 중엽부터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빚어졌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이 성장한 한국 경제를 지원 대상에서 잠재적 경쟁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한국 지배계급은 두 번의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는 1997년 IMF 위기 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이고, 또 하나는 한미FTA 체결이다.

둘 다 한국 경제를 개방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제 질서에 적극 편입되기로 한 것이다. 개방은 미국 기업들에게 전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었지만, 한국 지배계급은 한국 경제를 더 효율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이 희생돼야 했다. 한미FTA의 문제는 경제 '종속'이 아니라 바로 한미 두 지배계급들의 착취와 자본축적에 있었다.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적극 들어가는 것을 한국 자본가들은 당시에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고 불렀다. 중국 경제와 본격 통합된 것도 이때다.

상호 투자와 무역의 증대 속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은 안보 동맹과 함께 "기술 동맹"으로서 맺은 관계다. 198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이 도입한 기술의 56퍼센트가 미국산이다.

동맹의 비용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동맹 포섭에 역할을 결면서도 동맹국들에게 가입 비용을 내라고 수전노처럼 구는 것은(도청 건처럼) 오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의 군색한 처지 때문이기도 하다.

여야 의견 차는 여기서 비롯한다. 윤석열과 여권은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기로 한 이상, 이왕이면 어려울 때 화끈하게 돕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본다.

가령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갈 방미 사절단을 꾸린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보조금 요건 완화를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들은 4월 14일 미국 반도체법이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 추구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 전쟁으로

소모되는 무기를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기 지원은 한국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윤석열이 표방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모습인 셈이다.

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미국의 군색을 지렛대 삼아 더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둘 모두 한국 지배계급의 독자적 이익 극대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한미동맹을 지지하면서도 실천에선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한미동맹을 종속관계로 보면서 국익 개념으로 접근하면 한국 지배계급을 노동계급과 한편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는 오히려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해 친기업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반대를 위한 대중의 의식 발전에 해롭다.

가령 삼성반도체의 실적 부진을 두고 삼성이 미국과 윤석열에 의해 피해를 봤다고 보는 시각이 그렇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의 압박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세나 노동조건 공격 등에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8년 5월 당시 대통령 김대중이 경제 위기 탈출 협상차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을 때, 당시 민주노총 지도층은 국익 외교를 지원한다며 예고된 정리해고 반대 총파업을 취소했다. 그 대가는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의 광풍이었다.

한미동맹이나 한미FTA를 대미 종속이며 한국 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좌파는 이후 현실이 그와 다름을 보고 근본적 사회 변혁 전망을 상실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이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 지배계급이 그것을 통해 그 나름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봐야 한국 지배자들이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해 지정학적·군사적 이익을 키우려고 할 때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지배자들 모두에 맞설 수 있다.

김문성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과 더욱 악화되는 한국 경제

최근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퍼센트, 96퍼센트나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은 건 1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손실이 컸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 원 이상인데, 올 한 해 전체도 적자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 거품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정도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3개월 전에만 해도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공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하락기에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자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써 왔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반도체 산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반도체 경기 악화로 한국의 수출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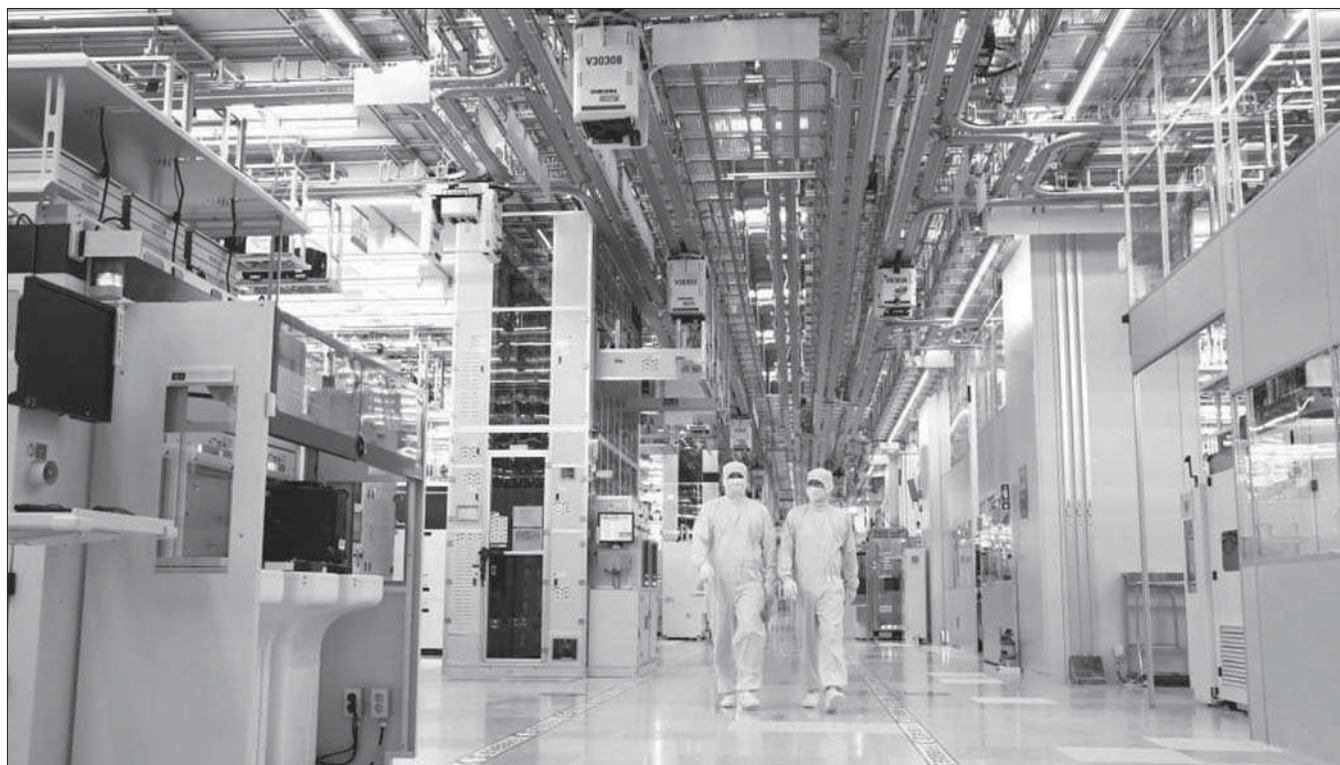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다. 1월에 42억 1000만 달러 적자로 사상 최악을 기록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 적자는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탓이 크다. 1~2월 반도체 수출은 1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억 달러(약 40퍼센트)나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 경상수지 적자 총액보다 더 많다.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도 대폭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려면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그러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간 3퍼센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중기 성장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특히 미국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소 은행들이 [또 다른 위기가 거론되는]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4분의 3에 달한다”며 은행 위기로 기업과 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 선언은 경기 침체의 위험을 보여 준다. 여기에 미중 갈등 격화도 한국 기업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계가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서 올해 연말에 경기 침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을 공산이 커지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잃고 있다. IMF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1.5퍼센트로 또 낮췄다.

게다가 미중 갈등 격화도 한국 기업들을 난처한 처지로 몰고 있다.

한국 대기업 총수들은 조만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를 얻고 싶어 한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쟁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보안 조사를 시작했다.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막을 수도 있는 조치다.

또, 시진핑은 광저우에 있는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깜짝 방문해, 한중 간 경제 교류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였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여러 혜택을 주며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로 고통받는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도 있다. 그

러나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수록 경제 분야에서도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편들어야 한다는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부동산 PF 위기

한편,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 불안정 심화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억제하게 만들어 다시 기업들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3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상장 건설회사 중 36퍼센트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중소 건설사뿐 아니라 규모가 꽤 큰 중견 건설회사의 부도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 2월에 시공능력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이어 지난달에는 에이치엔아이엔씨(133위)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대창기업(109위)도 부도를 내는 등 건설사 줄도산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보다 더 악화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사의 부도 위험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 부실 위험도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2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0.37퍼센트에서 1.19퍼센트로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사 35곳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0퍼센트를 넘어 위기감이 고조됐다. 지난해에 새마을금고가 해 준 부동산 PF가 급증했고, 대출 연체액도 급증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 대형 저축은행 2곳이 부동산 PF 대출에서 1조 원대 손실을 봤으니 예금을 빨리 인출하라는 소문이 ‘지라시’를 통해 퍼진 것이다. 금융 당국과 해당 저축은행이 소문을 반박해 뱅크런 위기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소문이 자꾸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증권사,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들의 파산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더 큰 위기와 패닉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 개악을 추진해 기업들의 이윤을 높여 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기업들과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강화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 등 생계비 위기에 맞서 임금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이 글은 4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QR코드로 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회는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의 관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의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체계적 도전' 세력으로 명시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 규모와 군사력 면에서 미국에 이은 2위의 강대국입니다. 이미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슈퍼 파워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격차가 크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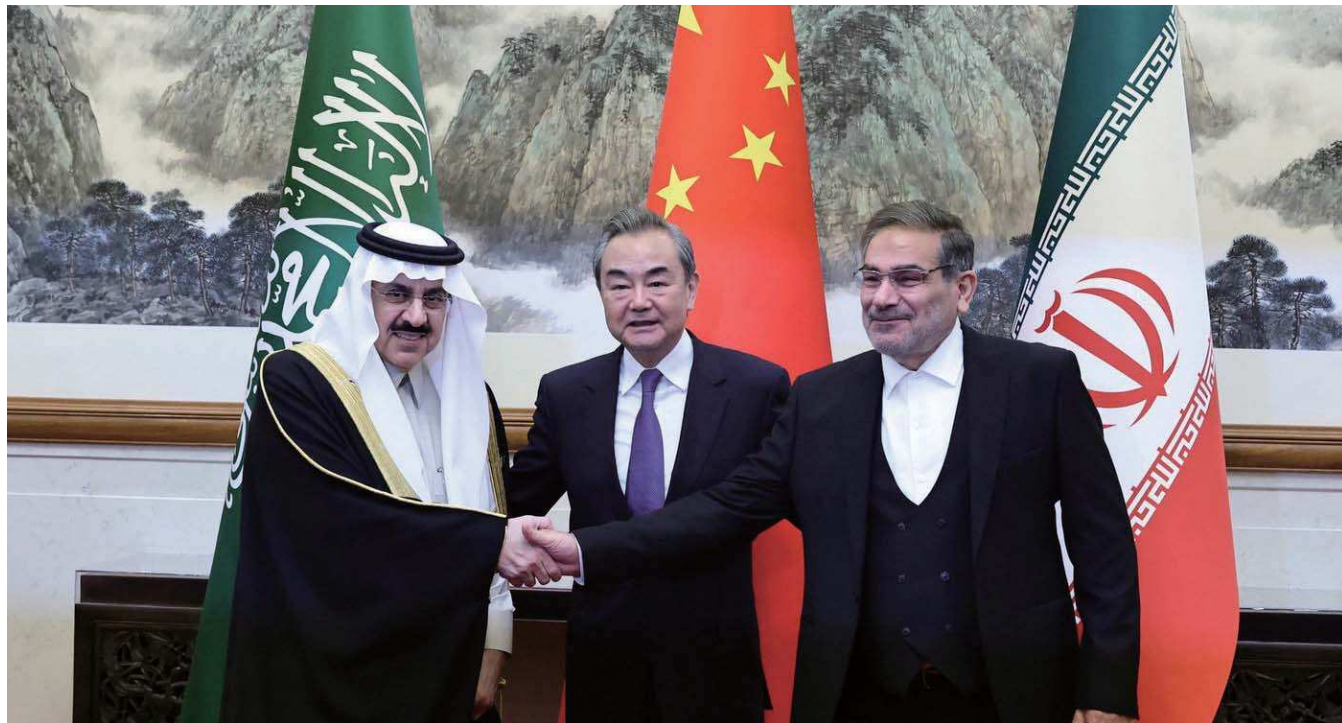
현재 중요한 쟁점은 점점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진핑이 천명한 것처럼 신중국 등장 100주년인 2049년에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될지일 것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2025년 즈음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예상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에서 시작되고 제로 코로나 봉쇄가 이뤄지자 중국은 붕괴 및 보직전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패권에 중대한 도전을 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발제에서는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가 계속될지 여부와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 패권 위협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40년 이상 연평균 9퍼센트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우측 그림) 중국은 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재함으로써 중동에서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과시했다. 중동에서는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이 그간 지배적이었다

약적으로 성장하자 대외적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군사력 증강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중국 지배 관료는 나름의 지정학적 목표들을 추구합니다. 예컨대, 미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지역 바닷길의 안전은 대외의 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료들은 또한 중국 경제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첨단산업 경제로 변모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모두 미국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를 좌시하면 자국의 패권이 결정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은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기존의 패권 국가인 미국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위기감을 느껴 전쟁을 벌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이 맞물리자 미·중 전쟁 예상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세계적 불안정이 커져 왔습니다.

미·중 갈등은 본질이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좌/우 이데올로기를 각각 대표하는 국가간 충돌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제국주의적 충돌입니다.

일부 좌파는 서방 강대국들이 낙후한 중국을 상대로 잉여가치를 뺏아내고 있다며 중국이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성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돼 온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레닌을 비롯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강대국들

의 국제적 경쟁 시스템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국가들이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바로 제국주의이고, 이 체제의 상층부에서 서로 패권을 다투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비록 미국에 견줘 그 경제력과 군사력이 자국 인근에 집중돼 있지만,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자본주의의 이익 증대를 위해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활용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키우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영토 확장을 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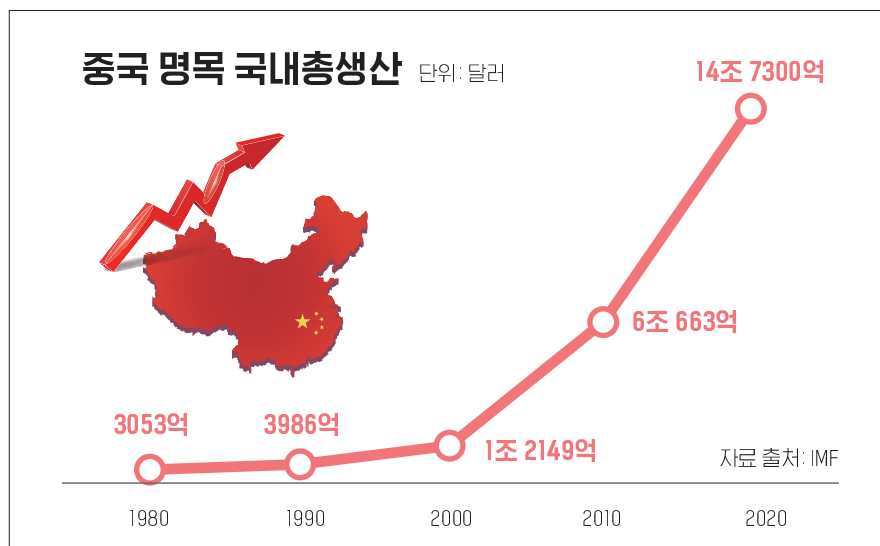
중국 앞에 놓인 난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실패 등으로 미국은 영향력과 위신에 잇달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료들은 미국의 쇠퇴를 전망하며 국제 정치에서 중국이 더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비록 그 위세가 전보다 약해졌지만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최강대국입니다. 중국의 도전에 맞서 여러 수단과 자원을 동원할 능력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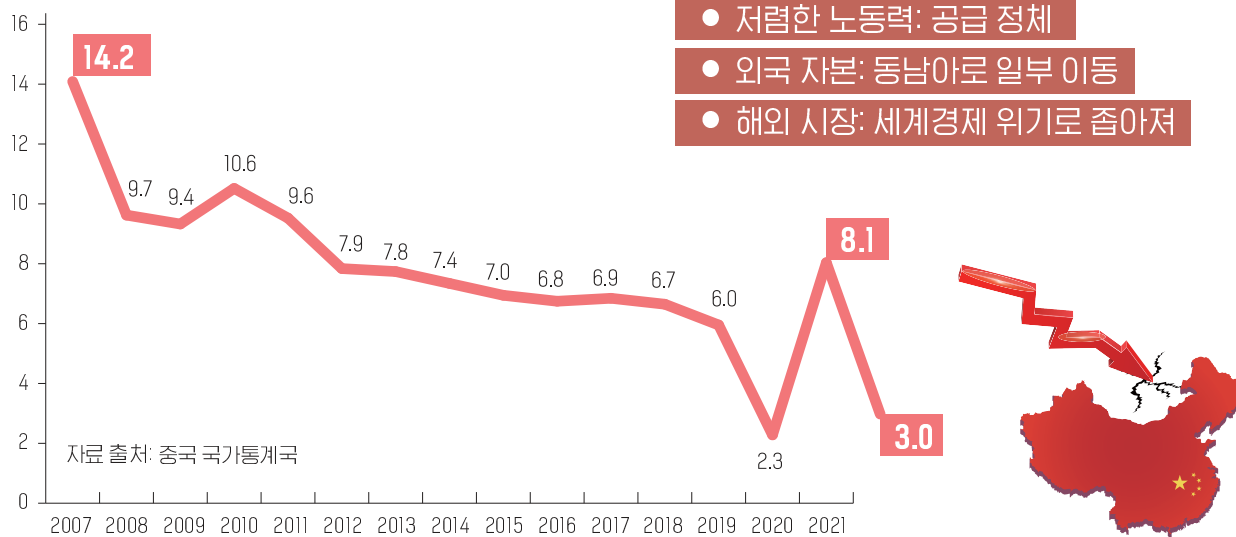
게다가 오늘날 미국이 처한 모순들과 어려움을 못지않게, 중국의 앞날에도 만만찮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 성장세가 한창때에 견줘



반토막 난 중국 경제성장률

단위: 퍼센트



반토막이 났습니다.(상단 그림)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는 지난 40년 동안 성공한 방식으로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은 저렴한 노동력,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넓은 해외시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가 정체하며 중국에서 저렴한 노동력 공급이 전만큼 순조롭지 않습니다. 반면,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더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임금을 겨냥한 외국 자본이 일부 동남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중국 제품의 해외시장이 항상 넓지는 않다는 점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을 확대해 이 모순을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저임금을 유지했기 때문에 국내 소

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업 전반의 이윤율이 낮은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결과 투자가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거품은 심각한 수준임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드러났습니다. 중국 부동산업계의 2위 기업인 헝다의 파산 위기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중국 지배자들은 이런 문제에 두 가지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려 합니다. 바로 중국제조 2025라는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하단 그림)

그러나 이 두 방안은 모두 미국의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 분야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첨

단기술뿐 아니라 군사적 경쟁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9세대 칩이 들어간 미사일과 차세대 칩이 들어간 미사일의 명중률이 100배 차이가 난다면, 반도체는 전략 미사일 분야에서 100배의 전략 승수 가치가 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시스템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설득하고 압박해 중국 봉쇄에 동참시켰습니다.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2015년 이래로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강화됐습니다. 2019년 트럼프가 서명한 국방수권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동맹 등을 추진할 때도 미국은 안보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일대일로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 진출을 늘려 왔습니다. 중국은 특히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입니다.(10면 상단 그림)

2000년도 이래 중국은 22개 개도국에 총 312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80퍼센트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는 국가들에 중국은 ‘최후의 돈줄’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에만 40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 이는 IMF가 지원한 액수(686억 달러)의 6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미국과 IMF와는 달리 빈국에 우호적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스리랑카·파키스탄·잠비아 등지에서 중국의 차관이 지닌 악탈적 성격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고금리로 차관을 제공해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들을 건설한 다음, 채무 상환 불이행을 이유로 그 시설들을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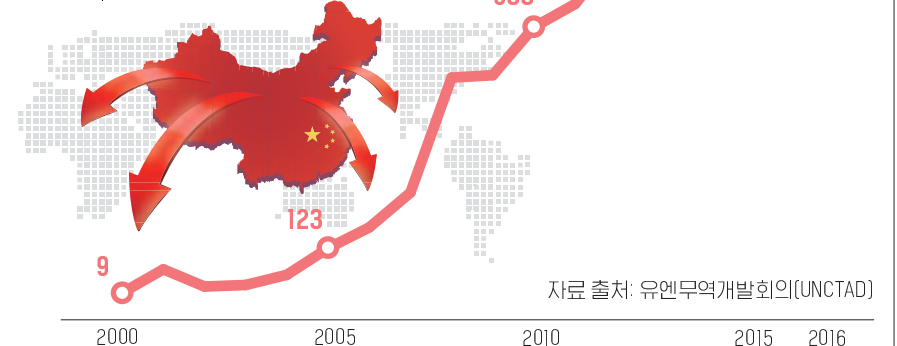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시도



중국 자본의 해외 진출

중국의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단위: 억 달러



→ 그러나 두 방안 모두 미국의 심각한 견제에 봉착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議)라는 또 다른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영토 존중, 내정 불간섭, 일방주의 배격 등을 내세우면서, 국가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간 갈등 해결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국제 질서에 맞서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인 '팍스 시니카'를 강화하려는 또 다른 제국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면서 중동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만만찮은 행위자가 됐음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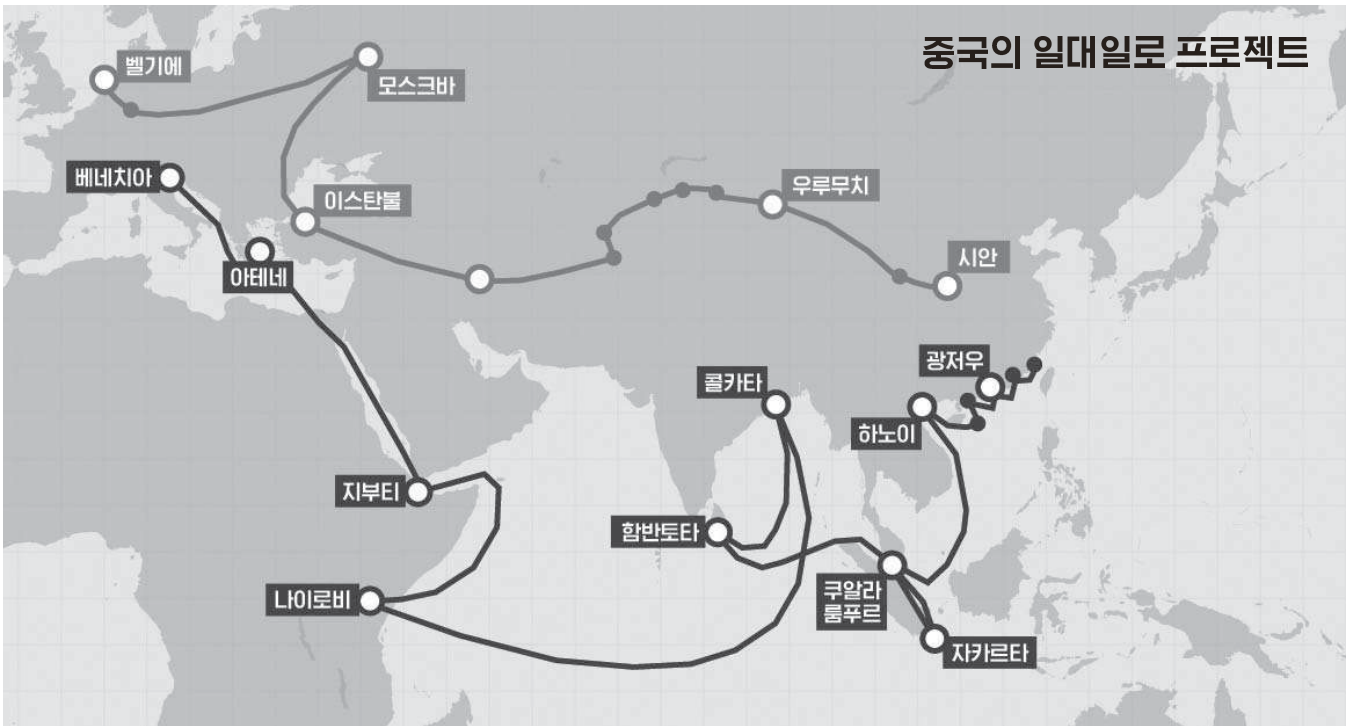
최근 사우디와 중국 간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방식을 채택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브릭스 국가들, 곧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은 달려화가 아닌 기축통화를 만들려 하는데,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잠정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당장 국제 금융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간과할 수 없는 변화임은 분명합니다.

미국 패권에 맞서 중국을 편들어야 할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칩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새로운 군사 협약인 오키퍼스,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나토의 전략 개념 수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일대일로, 상하이협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차관 제공으로 빈국을 약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력기구,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의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만큼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처한 경제적 곤란은 지정학적 적대 증대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 · 중 대결을 첨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 중국을 편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만만찮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또한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외국에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개입을 다반사로 하지만, 중국은 내정 불간섭과 경제 교류 활성화 방식으로 외교를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과 꼭 마찬가지로 경제력뿐 아니라 군사력을 이용한 공세적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서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결코 자국의 핵심 이익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을 상실하는 것을 결코 참아 넘기

지 않을 것이다.”

그때 시진핑이 말한 “중국의 핵심 이익”은 대만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에 더해, 해외의 중국 해군기지과 아프리카 · 중동 · 남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의 이익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시진핑은 무력 사용을 불사하고 2049년까지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격돌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의 세계적 확대를 꾀하며 침하고자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민해방군은 《강군전략》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해를 통제하고, 양양(태평양과 인도양)에 들어가며, 서태평양과 북부 · 중부 인도양 해역에서 유효하게 국가 이익을 보호한다.”

이번 양회, 곧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은 국방비를 7.2퍼센트나 증액한 293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비는 1000조 원이 넘는 미국 국방비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그러나 65조 원인 일본에 비해서는 4.5배나 많고, 그 증가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하단 그림)

중국은 제국주의적 경쟁에 국민적 지지를 동원하려고 국민민퇴, 공동부유 등의 슬로건을 내걸며 내부를 추스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유한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어질고 유능한 “현능정치”를 펴기 때문에 서방의 민주주의와 다르고 우월하다고 중국 관료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는 어질고 유능하기는커녕 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자 · 농민 착취, 정치적 · 시민적 권리 억압, 소수민족 억압, 동성애자 차별과 탄압 등으로 서방과 정도는 다르나 본질은 같습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과 국내적으로 억압적 통치를 강화하는 것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외부의 적과 대결해 이기기 위해 항상 내부의 적을 통제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중국이 미국을 주저앉힐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쟁투의 결과가 어찌 되든, 중국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계급은 경제 · 군사적 대결 속에서 끔찍한 희생을 치를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제국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특히, 친서방 정부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 제국주의 반대를 우선하되, 그 경쟁적 제국주의 국가인 중국을 지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 입법예고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성지현

법무부가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형법 77조(형의 시효 효과)와 78조(형의 시효 기간)는 ‘사형이 확정 선고된 뒤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형 집행을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1월이 되면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모 씨가 복역 30년을 채우게 된다. 원모 씨는 1992년 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술에 취해 종교 회관에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15명이 죽었다. 이 일로 원모 씨는 1993년 11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았다.

현행 형법의 ‘30년 사형 집행 시효’ 해석에 따르면, 원모 씨는 올해 11월이 지나면 사형 집행 면제나 더 나아가 석방 여부를

다룰 수도 있다.

그러자 법무부가 아예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구금이 사형 집행 절차의 일부이므로, 이미 시작된 집행을 가지고 시효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논란의 여지가 생기자 그 싹을 잘라 버리려는 것이다.

현재 사형제는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서도 법무부는 사형제를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의견서에서 사형제가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적 목적이 있”고,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 잘못에 따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이며, “범죄예방기능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형 —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

그러나 사형에는 아무런 “공적 목적”이 없다. 사형은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일 뿐이다.

우선,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미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유엔은 사형제도가 범죄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OECD 국가 중 최근까지도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인데,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의 사형 집행과 집행 전후 3개월간의 살인·강도 건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도 이렇게 결론짓는다.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유의미한 억제효과나 야수화(유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오히려 1997년 대규모 사형 집행 이후 살인 범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특별히 지적한다. 이는 “사형의 효과를 나타낸다고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경제 위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사형제가 흉악 범죄를 막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주의에 불박이처럼 붙어 있는 빈곤과 불평등, 소외가 체계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뒤틀린 인간을 낳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 체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하층민에 대한 편견,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도 중요하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유명한 사례다. 당시(1998년) 범인으로 몰린 윤 씨는 고문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다. 경찰은 학력이 낮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윤씨를 표적으로 삼았다. 진범은 2019년에 서야 밝혀졌다.

사형수 중에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그런데 사형은 어떤 식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

군사 독재 정권이 야수적인 고문과 협박으로 혐의를 조작해 사형을 집행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사형제 존치 이유로 “유족의 울분”을 내세우기도 한다. 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형 선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여론조사에서 사형제 존치가 우세하게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응보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다. 한국의 범죄 피해자 지원은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들은 국가 지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재원의 절반가량을 자체 모금으로 마련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국가가 사형제를 존치하는 이유

한국은 1997년 이래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형제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사형이 국가의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독재 정권 시절은 말할 것도 없다. 사형제를 연구해 온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는 1956년 이전의 사형 선고·집행은 정확한 통계조차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덕원 교수에 따르면 이는 여순 항쟁과 제주 4·3 항쟁, 한국전쟁 기간에 남용된 사형에 대한 기록이 공개되면 일게 될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다.

박정희 정부 때는 살인과 강도가 아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상당했다(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421명 중 120명).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본보기를 보여 줌으로써 대중을 위협하고 저항을 위축시키려 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 이래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사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사형제는 모델 패닉을 부추기고 국가의 사회 통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돼 왔다.

흉악 범죄를 요란하게 부각하며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 경찰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국가가 정의의 사도인 양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들은 계속돼 왔다. 이를 통해 권력자들은 정권이나 사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악마같은 개인에게 돌리고 사회 통제를 강화할 기회로 삼는다.

이명박이 2009년에 강호순 사형 판결을 계기로 11년 만에 사형 집행 카드를 만지작거린 게 한 사례다. 용산 참사 등으로 말미암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 타이틀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사형 집행 소식이 돌아 한 사형수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사실 사형수 대부분은 가난과 원한에 찌든 사람들이다. 현재 생존 사형수 59명 중 40퍼센트가량이 범행 동기가 금전 목적이었다. 반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형수가 되지 않는다.

또, 인간은 변할 가능성이 있고, 사형수들도 그렇다. 사형은 이것을 원천 부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형 집행 시효 폐지를 반대한다.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 사형제 위헌 결정을 바란다.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이현주

윤석열은 겉핥기만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텐데,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의 실체는 기업주들과 사용자들의 이익, 즉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윤석열은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서방 제국주의에 확실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지배계급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한일협정부서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그래서 윤석열의 행보는 재벌 등 기업주들에게서는 지지를 얻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나라 전체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포장하는 것은 계급 사회의 뿌리깊은 관행이다. 국가의 감시와 탄압, 군사력 축적, 전쟁 선포, 노동자 파업 파괴 등등 온갖 고약한 짓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왜 국익론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 옹호로 귀결되는가?

국익 논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한 나라 구성원이라면 모종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함을 가정한다.

그런데 노동자 파업 파괴를 명령하는 경찰 간부와 파업 중인 노동자들 사이에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 실업수당을 받는 노동자와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늘리려는 사용자들 사이에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까?

물론 국익 개념은 어느 정도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국경으로 나뉘어 있고, 우리 모두는 그중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내부는 계급으로 분열돼 있다. 한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다수 노동계급이 있고, 다른 한편에 서로 경쟁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수 자본가 계급이 있는 것이다.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수당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돌아갈 이윤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노동시간이 주 69시간으로 연장되거나 연금이 삭감되면 기업주들의 이윤은 늘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통만 늘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는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서 초월해 있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성공과 위상,

안정적 운영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자본 축적)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국가 관료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해야만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 경제를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로운 것이 국가와 사회에 이로운 것으로 된다.

그래서 고속 성장, 고수익, 시장 안정성 같은 기업의 목표가 곧 정부의 목표가 되고, ‘국익’은 유력한 자본가들의 이익과 동일시된다.

윤석열이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임을 내세우며 투자 유치에 애를 쓰는 한편, 화물연대, 대우조선 등 노동자 파업 파괴에 혈안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도 있겠지만,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려 하는 것이 윤석열 탄압의 본질을 이룬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집권 때의 민주당도 행동에 근본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중심에 계급 분열이 있다. 그러나 국익론은 이런 분열을 가리는 구실을 한다. 지배자들은 다수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익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며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인다.

정부가 어떤 행위를 옹호하는 데 ‘국익’을 거론할 때 그것이 어느 계급의 이익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국회입법조사처

실업수당을 받는 노동자와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늘리려는 사용자들 사이에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까?

위기가 오면 국익론 이용하는 지배자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는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국익론은 더 기승을 부린다.

그러나 국익론은 늘 노동계급을 공격하거나 희생을 강요하고 사회 폭대기층의 이익과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었을 뿐이다.

1997~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지배자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경제 위기

의 고통을 전가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살리자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인물]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돌아보기’)

제1·2차세계대전 같은 제국주의 전쟁도 ‘국익’의 이름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열강 각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등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다.

국적이 무엇이든 노동자들은 전쟁을 벌이는 지배자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

▶ 13면으로 이어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은 지배계급의 이익이다

▶ 12면에서 이어짐

좌파의 국익론은?

국익 옹호 주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좌파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가령 민주당 개혁파와 정의당 중앙, 진보당 등은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정책 등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물론 이때의 국익은 윤석열처럼 단지 지배계급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리키고, 이런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가가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규탄하는 것이다.

이런 국익론은 윤석열 같은 자들이 부추기는 국익론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현 정부의 친제국주의 행보를 비판하고 그에 맞서 투쟁한다는 점에서 좌파적이다. 그럼에도 공통 이익(국익)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좌파적 민족주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버전의 국익론은 좌파적임에도 모순과 한계가 많다.

첫째, 이런 종류의 국익론이 윤석열 같은 소수의 ‘반동적 모리배’를 제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나라 구성원에게 모종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그래서 공동의 이해관계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석열의 한미일 동맹 강화 노선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해롭기 때문에 문제라는 주장이 좌파적 윤석열 비판에

도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 훼손에 근거한 반대는 지배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면 금세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유리한 양보를 얻어온다면 야당들의 명분은 약화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경제’, ‘우리 산업’의 이익을 바라는 관점으로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일관되게 옹호하기 어렵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도 희생과 양보를 해야 한다는 논리에 취약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중의 ‘매판’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 계급을 초월해 단결하자라는 좌파적 포퓰리즘(민중주의) 관점에서는 노동계급 투쟁의 결정적 중요성은 간과되고, 노동계급이 고유한 요구를 내세우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게 된다. 대신 민주당 개혁파와의 동맹 추구가 중시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의 ‘해법’에는 반대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에 관한 그들의 입장도 본질적으로 그 질서에 편승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 동맹(특히 한일 군사 동맹)에 반대하지만, “남한에는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 동맹, 확고한 확장억제 전략”이 있다는 게 그 근거



좌파적 버전의 국익론도 모순과 한계가 많다

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은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일관되게 반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행은 동행을 위해 운동의 요구와 투쟁성을 삭감하는 불필요한 타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가령 미국 제국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은 삼가라는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당시에도,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당시 명칭) 내 개혁파 의원들이 파병안 국회 통과를 저지해 줄 거라는 운동 내 기대가 반전 운동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었다.(그러나 끝까지 한결같이 파병 반대 입장을 표명한 열우당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당시 파병 반대 여론과 행동 사이에 격차가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열우

당 개혁파와의 동맹을 중시하다 운동의 모멘텀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국익론에 근거한 반대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 구축에도 해롭다.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을 편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노동계급 모두의 생명과 평화와 안전과 관련된 일이다. 제국주의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지배자들에 맞서는 데서 한·중·일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국제적 연대로 반전 평화를 위한 힘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우리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관점으로는 국제적 연대를 어렵게 만들기 십상이다. 최악의 경우, 외부의 위협이 커지면(가령 중국이나 북한의 핵 위협 등)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한다면서 안보력 강화를 주문하며 국제적 연대를 아예 파괴하는 데로 나아갈 위험도 있다.

프랑스

파업 노동자들이 마크롱을 무너뜨릴 힘을 보여 주다

운동의 승리는 무기한 총파업으로의 전환에 달렸다

찰리 김버

프랑스 노동자들이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이며 마크롱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요구를 걸고 파업을 벌인다면 윤석열 반대 운동이 커질 수 있다.

프랑스의 언론, 정치권, 노조 간부들이 4월 14일에 있을 국가기관[헌법위원회]의 발표에 관심을 쏟는 동안, 4월 13일의 시위와 파업은 사회를 바꿀 진정한 힘을 보여 줬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개혁에 맞서 1월부터 전국적 시위를 벌여 온 노동자들이 12번째로 거리에 나왔다. 이전의 몇몇 시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우 컸다.

수십만 명이 주요 도시들 전역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마크롱의 야만적 공격을 수용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참고 넘어가기”를 거부했다.

4월 13일 아침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수천 명이 의미 있게 파리와 몇몇 도시에서 맹렬한 “비공식” 시위를 벌였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아브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운동이 끝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노조들이 투쟁을 완전히 관둬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4월 13일 행동의 날은 파리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해 이브리 쓰레기 소각장의 일부를 점거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으로 시작됐다.

〈리베라시옹〉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많은 학생들과 다른 부문의 파업 노



4월 13일 12번째 전국 행동의 날. 낭트의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동자들이 파업 재개를 지지하러 왔다. 저 멀리 소각장 지붕 위에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노동자들은 건물 상당 부분을 덮는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현수막엔 ‘100퍼센트 공영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늘려라’라고 쓰여 있다. 시위대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환호하며 폭죽을 터뜨렸다.”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신임 사무총장 소피 비네가 도착해 사다리를 타고 옥상에 올라 파업 노동자들을 만났다.

철도·의료·교육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파업 노동자들은 기업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소유한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

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부지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다. 아르노는 프랑스뿐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할 것이다.

쉬드 철도 노조 활동가들은 LVMH 본사 앞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깃발을 울리며 이렇게 외쳤다. “여기 돈이 있다.”

신(新)생태사회민주연합(NUPES, “뉴프”)의 좌파 정치인 장뤽 뮐랑송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인과 노조 지도자들은 4월 14일을 13일보다 더 중시한다. 14일 헌법위원회는 마크롱이 연금법을 통과시키려고 동원한 수단이 합헌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의회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헌법 49조 3항을 발동했다. 그러면 정부가 불신임안 표결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그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다. 그리고 정부는 불신임안 표결에서 패배하지 않았다.

나라는 “지옥이 될 것”

헌법위원회가 예상대로 마크롱의 연금 공격의 핵심 내용을 승인한다 해도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대중 행동을 끝낼 태세가 돼 있다. 그러나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분노가 크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위원회가 마크롱의 거수기 구실을 하면서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 생브리의 시(市)에서 파업 중인 한 쓰레기 수거 노동자는 4월 14일에 “축제가 벌어지거나, 전쟁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동자는 연금 개혁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지옥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분노할 것이며 나도 함께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냥은 시위를 우려해 4월 13일 저녁부로 헌법위원회 앞 시위를 금지했다. 학생들은 14일에 행진을 하기로 표결했고,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행진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활동가들은 헌법위원회 건물 맞은 편에서 마크롱의 법안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체포했다.

오를레앙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한 고등학생 트리스탕은 4월 14일에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헌법위원회

▶ 15면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 14면에서 이어짐

는 마크롱의 친구들로 가득하다. 그들이 그 법의 극히 일부를 무료 돌릴 수는 있어도, 투쟁은 거리에서만 이길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허용할지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한 공식 절차에 따르면, 구속력도 없는 이 국민투표가 승인되려면 국회의원 18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확보된 상태다.

그런 다음에는 유권자의 10퍼센트인 487만 명이 9개월 내에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려면 더 필요한 곳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

운동이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운동은 노조 지도자들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간헐적인 집중 시위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힘을 꺾으려는 대통령을 물리칠 수 없었다. 4월 12일, CGT토탈 노조의 정규 노동자들은 3월 7일 시작한 무기한 파업을 끝내면서 씹쓸하지만 도전적인 어조로 파업을 접는 이유를 밝혔다.



“100퍼센트 공영화 /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늘려라” 파리 외곽의 쓰레기 소각장 일부를 점거한 파업 노동자들

“지금 운동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면, 그것은 몇 주나 파업을 벌인 기층 노동자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적들의 야욕에 대항하는 세력 균형을 조성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월 7일부터 행동의 날을 7번 개최하는 대신에, 이 파업 일정들을 하나로 이어서 경제를 완전히 멈춰 세웠어야 했다. 그랬다면 운동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띠업띠업 행동의 날을 잡는 투쟁 방식을 결코 믿지 않

았던 사람들에게 지지를 표한다.”

그러나 정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저항을 호소하며 성명서를 끝맺었다. “마크롱 정권이 오직 경찰과 탄압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롱은 자신이 4년이나 되는 남은 임기를 무사히 끝낼 수 없고, 추진하려던 다른 개악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싸웠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모든 이들이 전장으로 돌아갈 때 적용할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헌법위원회가 뭐라고 결정을 내리든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저항이 3개월을 지나면서 프랑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에 그치지 않는 총파업과 전투적인 거리 시위가 있었다면 마크롱은 벌써 박살났을지도 모른다.

번역 박이랑

출처 Charlie Kimber, 'French strikers show power to break president Macron'(2023. 4. 13)

▶ 16면에서 이어짐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물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를 헤어나기 힘든 고통에 빠뜨릴 뿐 아니라 그의 평판을 심각하게 해쳐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방어 수단,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가짜뉴스는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

진실에 다가가려면 다양한 가능성에 관한 탐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인에게도 숙고의 시간과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은 감각기관과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홍

수가 우리를 진실로 안내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나 말초적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특화돼 있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그런 탐색의 가능성을 방해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소셜미디어의 주된 수입원인 기업 광고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셜미디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일파만파 퍼져나가 다양한 사회집단 안팎에서 신뢰를 파괴하는 효과를 낸다.

소셜미디어를 저항 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된 셈이다. 오

히려 소셜미디어가 운동에 필수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과 연대의 기초인 상호 신뢰를 뒤흔드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허위사실 유포와 중상모략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우익의 피차별 집단 혐오 표현이나 억압자들이 피억압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두고 그들의 표현의 자유라며 보아넘겨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피억압자, 피차별자들의 표현 자유를 뜻하는 것이지, 억압자들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자들에게는 굳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더라도 반론의 기회와 수단, 자원이 풍부하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자들이

지 그 자유를 억압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정부에게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말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이 될 것이다. 문화 기구들과 언론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여겨 자포자기하는 것도 불필요한 투항일 뿐이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은 우파와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여러 편견과 허위사실들을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운동 속에서 싸울 자신이 더 생길수록 그런 편견과 허위사실들은 도전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진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그런 운동을 강화시키려 하는 독립적 언론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을 추구하는 혁명적 언론은 이런 일을 수행할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장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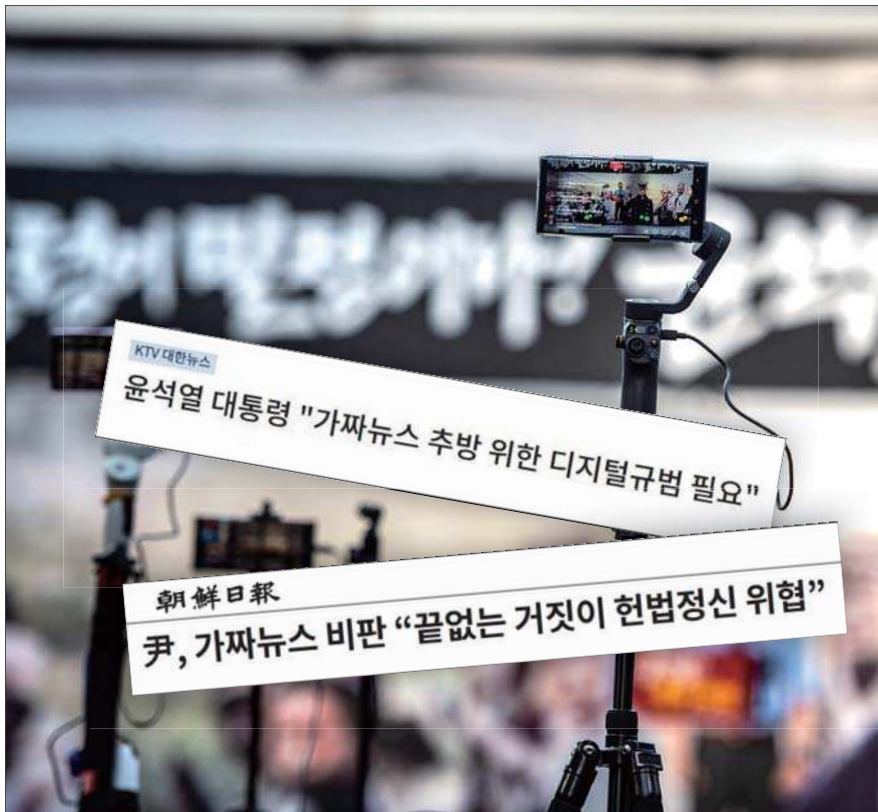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은 취임 초부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싸잡아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왔다. 3월에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는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도 참가했다. 이들이 지키겠다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 준다.

자신을 향한 비판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것은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자주 쓰던 방식이다. 반론을 퍼거나 해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고 여길 때, 사람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진실 공방을 벌여 아예 논란 자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다. 주변적인 정보나 사소한 오보 등을 침소봉대해 진위 공방을 벌이며 쟁점을 흐리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가짜뉴스 탓으로 여겨 흔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문제 삼아 취재를 거부하거



윤석열이 처벌하려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세력이다

나, 무속인 천공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지지율 하락)은 단지 비속어나 무속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의 핵심 정책들이 진정한 문제다. 노동시간을 살인적인 수준으로 연장하려 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우회 공급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짓밟는 등의 정책들 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짓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 (가능하리라 믿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득할 생각도 없다. 후쿠시

마 오염수 방류 용인이나 미국의 도청 사건으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등 정부 자신이 해명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저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서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는 식이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정당한 우려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정작 이 정부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흔적은 찾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

가 퍼질 때에도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마약 사용 증거 찾기에만 열중했다.

정부 비판은 가짜뉴스라고 규제하겠다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저 '자제'를 호소하겠다고 한다.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그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잠재적 저항 가능성을 위축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에 '가짜뉴스'를 문제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유였다.

따라서 집권당이 누구든 정치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정부에 맡길 수 없다. 게다가 정치 권력을 쥔 자들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캐스 선스타인은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가 허위사실을 처벌하거나 차단하려고 할 때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반대세력이었다." (캐스 선스타인, 《라이어스》)

좌파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검열·처벌하려는 시도 일체에 반대해야 한다.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온전한 표현 자유 보장은 허위사실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 15면으로 이어짐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는 무기

①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로**

4월 19일(수)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marxist-theory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